

# 카지노 폐해 방지 위해 규제법 손본다

### 김관영 의원 '카지노 규제 3법' 발의... "카지노감독위원회 설립해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우려 해소"

카지노업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법제화해 그동안 지적돼 왔던 카지노업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카지노업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카지노 규제 3법'을 발의했다.

카지노 규제 3법은 카지노 선진화 방안과 전문 감독기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카지노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법을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카지노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전문 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카지노 감독을 위해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문제 부장관에게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건의 권한 부여 ▲카지노업의 현장 지도·감독을 위해 카지노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임원의 자격 심사 ▲카지노업 허가 대상의 엄격한 제한 등이다.

그동안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현행법상 카지노업의 규제 조항이 허술하고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를 포함한 국내 카지노 17곳을 관리하는 데 배치한 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강원랜드의 폐해도 관련 규정 미비와 관리 인력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독립 기구인 카지노감독청에서 130여명의 직원이 카지노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철저한 카지노 관리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복합리조트 개장 이후 도박중독률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도 싱가포르 수준으로 카지노를 관리하자는 취

지다.

김관영 의원은 "카지노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해야 할 대상이 아닌 관리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며 "규제 미비로 인한 강원랜드의 문제가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카지노업을 엄격하게 규제해 카지노 선진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카지노에 대한 선진적인 관리 기법 도입을 토대로 향후 새만금복합리조트 사업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문재인 "해법 없으면 중대 결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 교체에 단행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또 다시 놓치고 있다"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시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겸허하게 국민들 앞에서 반성하면서 용서를 받고 그것으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분노한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위기의 본질은 박 대통령에게 진정한 반성이 없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어 "반성 없이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있다"며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저지른 죄보다 거짓말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이 죄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국민의 압도적인 민심은 박 대통령이 즉각 하야하고 퇴진해야 한다는 것이고 나는 그 민심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의장에서 차선책이라도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그 도리로서 제안한 거국대각 방안을 박 대통령은 거부했다"고 이번 개각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나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대통령 하야 요구에 관해선 "정치적인 해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나 역시 비상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뉴스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여의도역 주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 장외로 나간 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선전전

더불어민주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처음으로 장외로 나서 선전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당원 등 1,200여명이 참석한 '최순실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대응수위를 높이며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추미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대통령을 조사하라! 국민의 뜻이다!"라고 쓰인 어깨띠를 착용한 채 약 30분간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

눠줬다. 추 대표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대통령 수사 받게 합시다", "헌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며 당 입장을 홍보했다.

함께 참석한 김영주 전해철 김병관 최인호 김춘진 심기준 최고위원과 이석현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 역시 시민을 상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여론전에 가세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오늘 행사는 장외투쟁은 아니고 장외 시

민 홍보전을 한 것"이라며 "향후 지역 시도당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홍보전, 선전전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대규모 촛불시위에 지도부 차원에서 참석하지는 않되 개별 의원의 참여는 막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야당과 협의없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을 교체하기로 발표하면서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뉴스

## 김중회 "최순실예산 전액 삭감해야"

국민의당 김중회 의원(김제·부안)은 제346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2017년도 문화·예술·체육 분야 곳곳에 퍼져 있는 4,200억원에 달하는 대통령 비선실세, 소위 최순실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일호 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답게 시민경제 활성화와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구현할 수 있는 예산은 답보상태에 있는 반면에, 유독 문화융성관련예산은 대폭 증액되거나 신설된 경우가 많다"라면서, 이게 "국정미비를 초래하게 된 소위 최순실예산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조윤선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분야 2017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증액은 물론, 지역 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과 문화창조 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등 4개 사업이 신규로 채택되어 총 127억28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374억 6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최순실예산의 전형 아니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국가재정을 삼킴처럼 사유화한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의 전횡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간사사업인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은 "문제부예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최순실 등이 예산을 편취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감사원 감사나 검찰의 수사 등을 요청하고, 문제점을 바로 잡은 후가 아니면 예산 집행을 속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5조3백억원에서 2017년엔 총 7조8백47억원으로 매년 평균 9%의 예산증가율로 '17년도 국가예산증가율 3.7%와 쪼뼛미리만 농업부문에 예산증가율 0.4%를 훨씬 상회한 예산안으로,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예산, 미래창조과학부의 디지털콘텐츠 예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분야 예산을 포함한 다. /인재용 기자

## 황교안 불출석에 예결위 예산심사 파행

박근혜 대통령이 2일 황교안 국무총리를 전격적으로 경질하면서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결위가 사실상 가동 중단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에는 황 총리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야당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황 총리의 불출석을 비판, 예산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황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세종로 정부서물청사 별관에서 이임식을 하겠다고 공지했다가 2시간 만에 취소하면서 야당원들의 비난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태원 예결위위원장은 "황 총리가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되지도 않았는데 이임식을 한다고 한다. 국정공백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며 "누구와 예산안을 논의하.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든다"고 황 총리를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김태원 의원은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야당은 이 상황에서 예결위를 정상가동하는 게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고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내년도 나라살림을 다뤄야 하는데 이것을 열어야 하는지 가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체로 황 총리를 두둔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황 총리를 비난했다.

윤상직 의원은 "황 총리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일호 경제부총리 대신 기재부 2차관이 출석했고 관련 부처 차관들이 다 출석했다. 예산심사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산동 의원은 "이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내각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유감"이라고 황 총리를 비난했다. /뉴스

축! 전주매일 창간 8주년

부안으로  
마실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滿福